

추경 급한데... 일본 공세에도 버티는 한국당

민주당 "팀 킬 말라"...한국당 "철 없는 친일 프레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전면 중단한 여야는 23일에도 '친일'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에 대한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공감 제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추경 처리를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국회 빌런(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추경 빌런이 아닐까 비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는 우리 정부 등 뒤에서 자책골 또는 팀킬 행위를 멈추라"며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제로 정당"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친일 프레임' 씌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본을 극복하는 별다른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만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철없는 친일 프레임이나 집착하는 어리석은 정치는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의 추경 처리 압박에 대해선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며 "그것을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 바쁘다. 국가 위기마저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당은 애초 교섭단체 합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에 합의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충돌을 멈추자고 '중재'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추경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대일 결의안과 민생법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협상에서 자당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겸정소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하자'는 수준의 언급만 있었을 뿐 공식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개특위 1소위원장 놓고 힘겨루기

민주당 "고수"...한국당 "우리가 말아야"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홍 선임 위원장은 회의에서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해낼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과 정치개혁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심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정제원 의원은 향후 정개특위 운영 방향을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준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던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하고, 한국당 위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며 "합의해서 개혁하는 두 가지 결단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밑에서 만든 것으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했다"며 "개혁대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말라.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산하 1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갈 경우 개혁안이 좌초할 수 있다며 1소위 위원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입장 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한국당이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원내대표 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日, 수출 규제 철회 안하면 新물산장려운동 전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탄대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는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다양한 친선

교류 활동을 펼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일본의 조치는) 그동안 양국 기초 지방정부 간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불튼, 한·일 갈등 중재할까

첫 단독 방한...외교·국방 현안 포괄 논의할 듯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한 가운데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났다. 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과연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발미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자 정의용은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한국의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는 정의용과 외교부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합정 파견 등 실무적 문제가 한미 국방 당국 간 논의해야 할 사항이어서 이 역시 볼턴 보좌관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日경제보복 SNS 여론전 중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이후 계속해 온 SNS 여론전을 멈췄다.

지난 13일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시작으로 22일 오전까지 열흘 동안 무려 43건의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바 있는 조 수석은 23일 페이스북 등 SNS에 후속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았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글을 올린 뒤, 주변 인사들에게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SNS 글을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열흘간의 여론전으로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 것이라는 판단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오히려 정치권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의 '친일·반일' 프레임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 실패와 외교안보 무능을 커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조 수석의 여론전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 수석의 이런 여론전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진중환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일본 연수 취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민주당 소속 일부 시·구·의원의 일본 연수를 전면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전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의 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당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의원들의 일본 연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